

버스노동자투쟁 지지!! 버스문제 해결 촉구!

회계투명성 없는 '묻지마'식 전주시내버스 보조금 지급 규탄
전북시민사회단체 대책위 기자회견

○ 일시: 2013년 12월 5일 오후 1시

○ 장소: 전주시청 앞

버스파업 해결과 완전 공영제 실현을 위한
전북지역시민사회단체 대책위

회계투명성 없는 '묻지마'식 전주시내버스 보조금 지급 규탄한다!!

1. 2009년 전주시내버스 경영진단용역보고서에서 버스노동자들의 월 임금을 백 만 원 가량 부풀린 것이 밝혀지는 등 전주시내버스 회사에 보조금 지급의 근거가 불투명하다는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이렇듯 그간 지급된 매년 120여 억원의 보조금에 대해서 회계투명성이 담보되어 오지 않은 가운데, 이에 더해 올해는 180억, 내년 190억 이상으로 보조금이 증가하게 될 상황이다.

2. 전주시가 2013년 추경예산에 반영하려는 보조금 인상은 2012년에 사업주 직장폐쇄로 인해 발생한 적자 29억 4800만원을 보전해주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2012년 사업주의 직장폐쇄가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은 버스운행 차질의 책임이 사측에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전주시가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회사가 자신의 손실에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

3. 또한 전주시는 이미 올해 상반기 재정심의위원회에서 2012년 분 42억 적자를 보전해야 한다고 제기하고, 2014년 본예산에서도 2013년 분 72억 적자를 추정하며 보조금을 결정했지만, 그 근거인 2012 경영진단용역보고서는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다. 차량 감가상각을 11년에 걸쳐 해야 했음에도 보고서는 9년으로 잡은 것, 인건비를 버스 한 대당 실 운전인원은 2.16명이지만 보고서는 2.5명으로 계산한 것, 그리고 주말 감차량이 규정보다 많은 상황이라는 점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4. 이런 가운데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지난 11년 동안 수익계약으로 (주)보민을 광고 사업자를 선정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업주가 재정지원을 줄이려는 노력을 등한시했음이 확인됐다. 전주시내버스는 2009~2012년까지 해마다 2억 6천만 원을 광고수익으로 얻은 데 반해, 대구·광주는 공개입찰로 각각 120억, 82억의 광고수익료를 얻었다.

5. 보조금을 둘러싼 문제의 근본 원인은 공공성을 담보한 대중교통운송이 민간에 맡겨져 있는 현실이다. 시내버스는 시민 편의를 위한 필수적인 공공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지자체의 보조금이 지원되어야 하지만, 현재 그것을 관리하는 주체는 민간이기 때문에 보조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감사받을 의무를 지고 있지 않다. 회계 불투명.원칙 없는 보조금 지급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전주시가 시내버스를 전면적으로 공영제로 전환하고 직접 운영

해야 한다. 이것이 혈세 낭비를 막고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가장 바람직한 길이다.

6. 불투명한 경영으로 일관하고, 사업자파업으로 버스운행 중단을 초래한 데다, 명분도 없이 장기적으로 노동조합과 임단협을 지연함으로써 시민 불안을 조성하고, 심지어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감차하겠다는 협박까지 자행한 사측에 대해 원칙 없이 보조금을 인상해 퍼주는 것은 정의를 짓밟는 일이다. 전북시민사회단체는 이를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7. 다만 전국적으로 최저수준의 임금을 받는 전주 버스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것은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를 전주시가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다. 2014년도 보조금 예산에서 노동자 임금인상분을 별도 항목으로 분리한 것을 환영하며, 전주시는 이를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8. 전주시의회는 재정심의회에서 근거 없이 수립된 이른바 사측의 적자보전 재정지원금에서 노동자임금목적 보장에 필요한 금액 이외 전액 삭감하라.

우리의 요구

- 사업주만 배불리는 보조금 지급, 전주시를 규탄한다!
- 회계 투명성 없이 보조금 없다, 사용처 불명한 보조금을 즉각 삭감하라!
- 완전 공영제 실시로 버스 공공성 확보하라!

2013. 12. 05

버스파업해결! 완전공영제실현! 전북시민사회단체대책위